



김중희 위원장이 간담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인문수기자 asy77

## “원·하도급간 신뢰 회복 저가수주 악순환 끝자”

### 종합·전문건설사 ‘相生 간담회’ 열려

종합건설사 외주 담당자들과 전문건설사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업역과 세대 간 간극을 좁히고 신뢰와 파트너십 강화를 다짐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회장 심상조)는 지난 14일 저녁 서울 강남구 논현동 남포면역에서 ‘종합건설사 외주협의회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시회 건설상생발전위원회 김중희 위원장(강릉건설)과 위

원들, 종합건설사 외주 담당 직원 모임인 외주협의회 박철홍 회장(한신공

영)과 집행부, 시회 장래홍 회원정책지원본부장과 직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종합과 전문 건설사 만남에는 건설경제신문이 가교 역할을 했다.

상생발전위원회는 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 모임이 실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강조했다.

전문업계 처지에 대해서는 “호랑이 등을 타고 달리는 것 같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살하는 사람이 있을 것”, “모아 원형경기장 안에서 피 터지게 싸우는 꼴”이라고 하소연했다.

이 같은 실정을 개선할 방법에 대해서는 공사비 정산과 신뢰 회복, 저가수주 등의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정산에 대해서는 양쪽 모두 추가작업과 같은 사안을 서면으로 남기는 등 증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종합업계는 정산을 해주고 싶어도 증빙이 없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주의를 촉구한 반면, 전문에서는 증빙을 남겨도 안 주는 경우가 있다고 서운함을 표시하기도 했다.

원·하도급 간 신뢰와 저가수주 악순환 근절에 대해서는 양쪽 모두 중요성을 공감했다.

최재원 위원(국영지엔엘)은 “신뢰가 되지 않으면 선 후 공정이 꼬이고 결국 비용이 올라간다”며 “인건비와 자재비 비중이 커지고 있지만, 그 근거에 대해 다툼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 외에도 하도급사를 믿지 못하다 보니 비용이 늘어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저가수주에 대해 종합 측은 실적단가 위주, 최저가로 견적을 뽑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 같은 현상은 저가투찰에 나서는 전문업체들 때문에 발생

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전문업체들은 실적단가 위주, 최저가 적정 금액으로 입찰에 나서달라는 주문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종합과 전문 문제만큼 세대 간 차이도 화제가 됐다. 종합건설사가 어렵다 보니 구조조정으로 현장소장 연배가 낮아졌고 이들의 경험 부족은 소모 부재와 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문 측은 전했다.

종합 측에서도 “이전 세대와 현재, 후배들의 협력업체 대하는 태도가 다 다르다”면서도 전문업체 대표들에게 “건설업계 대선배님들을 만나뵙게 돼 영광”이라고 깃듯이 예의를 갖췄다.

김영식 위원(구산토건)은 종합건설사 외주 담당자들에게 “발주, 시행, 정산까지 가교 역할을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현장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 본사 외주팀에서 나서달라는 것이다.

박철홍 외주협회장은 “합리적 타협점을 찾아야 하는데 매뉴얼이 부족하다”며 “서로 피해가 가지 않는 매뉴얼을 만들어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김중희 시회 상생발전위원회장은 “종합과 전문의 상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모임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석기자 jskim@

### ‘유명무실’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 보증제

## 국토부 ‘관리감독 소홀’ 도마에

국토교통부의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 전면 실패조사가 오리무중이다.

2015년 대통령 업무보고에 이어 지난 3월 종합·전문업계와 대한건설기계사업자총연합회 등과 만나 오는 5월 실패조사를 시행키로 했지만, 지금까지 구체적인 일정이나 내용조차 마련하지 못하면서 ‘관리감독 소홀’이라는 도마에 올랐다.

이렇다 보니 건설업계마저 과거 관행대로 보증서를 미발급하거나 실패조사 시행 시기를 고려해 보증서 발급을 검토하는 등 눈치 보기도 심화되고 있다.

오희택 민주노총 사무처장은 “빛 좋은 개살구다. 말로만 하는 ‘전면 실패조사’가 정부정책의 현주소”라며 “하도급업체가 공사계약 이행을 포기하고 부도를 내면 건설기계 대여금을 못 받는 경우가 대반이다. 채불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도 실패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 사이 대금을 받지 못한 건설기계업계의 고충은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 제도 시행 후 보증서 교부율 0.3% 그쳐

### ‘말로만’ 실패조사… 채불액 갈수록 증가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 시행 부실

정부는 2012년 12월 건설기계대여대금 채불을 방지하고자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방안을 도입한 뒤 2013년 6월부터 제도를 시행해왔다.

그러나 보증서 교부율은 0.3% 수준에 머물고 있다. 대한건설기계협회에 따르면 영업용 건설기계는 20만2000대 규모다. 건설기계에 대한 보증서를 월 단위로 발급하면 총 242만2000건 수준이다.

반면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이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발급한 보증서는 7263건에 그쳤다.

지급보증서 미교부 시 시정명령과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지만, 실제 처벌이 미흡한 데 따른 결과라는 게 민주노총의 설명이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토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민간(68.31%) 건설기계사용현장에서 ‘건설기계대여보증 실패조사’를 한 결과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곳은 9개 현장(10.1%)에 그쳤다.

발주처의 정비대금 직불 또는 200만원 미만의 소액 계약으로 지급보증서 발급이 면제된 곳은 34개 현장(38.2%), 나머지 46개 현장(51.7%)은 미발급 상태였다.

특히 공공기관 발주공사에서는 58개 현장 가운데 지급보증서가 발급된 곳은 8개 현장에 그쳤다.

21개 현장은 보증서 면제, 나머지 29개 현장은 보

증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같은 실패조사는 매우 극소수 현장에 그친 것으로 간신히 평가된 지급보증제의 실효성을 높이지 못했다.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건설기계장비대금 채불은 올 1월에 만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추산 70억원에 육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패조사 일정·내용조차 마련 못해

그러나 국토부의 전면 실패조사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패조사는 하청지만, 아직 일정이나 내용을 마련하지 못했다. 상반기에 하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내부 협의가 필요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결국 국토부의 관리감독 소홀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 부실을 초래하는 구조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매해 시행하는 하도급거래 서면실패조사 등과 비교하면 결과는 더 심각하다.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윤지호위원장에 따르면 서울시 채불신고센터에 2011~2013년까지 접수된 임금, 하도급대금, 자재·장비, 기타와 관련한 신고건수는 총 8893건이다.

구체적으로 △임금 267건(30%) △하도급대금 147건(17%) △기타 61건(7%)인 반면 자재·장비대금은 408건(46%)을 차지했다.

특히 2011년 89건이던 하도급대금 신고는 2013년 27건으로 대폭 줄었지만, 자재·장비대금은 같은 기간 143건에서 123건으로 소폭 줄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연·최저 서면실패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 번 할 때마다 수만 개에 달하는 기업을 조사하며, 위반 사항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하도급법 준수를 강제하고 있다”면서 “반면 국토부는 간신히 평가된 내용조차 제대로 이행되는지 살펴보지 못하고 있다. 너무 비교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이 “이번 방법이든지 전면 실패조사를 진행해 모범사례와 개선사례를 찾는 게 필요하다. 건설기계 대여업자 상당수가 직접 장비를 조종하는 1인 차주나 영세사업자인데, 이들을 보호하지고 만든 법을 유명무실화 시켜선 안 된다”면서 “100개 현장 실패조사 등은 조속히 열어야 한다. 지난해에도 국토부는 실패조사를 한다고 했지만, 결국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말하기 부끄럽지만, 관리감독이 없는데 예치 비용을 들여 지급보증서를 끊어야 한다. 일계를 통틀어 패들리를 받은 사례가 한 손에 꼽히는 수준”이라며 “실패조사가 시작되면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는 곳도 많이 늘어날 것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형용기자 jeh8day@